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안내

푸르른 5월, 모두 건강하시고 화평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청렴을 향하는 우리!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2024. 5. 20.

유 일 여 자 고 등 학 교

1.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관련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2.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불량식품제조, 판매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안전	부실시공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 광고

3.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	국번 없이 1398(일상고발) 또는 110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팩스	044-200-7972
방문·우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4.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분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 됨.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부패 공익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징계하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2~7782	

5.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패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포상금	부패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구조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2~7748	